

자료 1

대한민국의 ISDS 현황

1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 청구액은 환율 1달러당 1,187원 기준

	청구일 및 근거협정	문제 조치 (상대방 주장)	청구액	주무부서	상황
론스타	'12.11.21. 한-벨 BIT	①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② 국세청의 관련 과세	46.8억 USD (5조 5,552억 원)	법무부	진행 중
하노칼	'15.4.30. 한-네덜란드BIT	국세청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과세	2.5억 USD (2,968억 원)	국세청	종료 (취하)
다야니	'15.9.14. 한-이란BIT	금융위의 KAMCO를 통한 대우일렉 주식 매매 계약금 몰취	935억원 (한화 청구)	금융위	패소
엘리엇	'18.7.12. 한-미FTA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삼성물산 합병 건 투표 찬성 압력 행사	7.7억 USD (9,140억 원)	법무부	진행 중
미국 투자자	'18.7.12. 한-미FTA	국토부 등의 서○○ 소유 주택 수용	300만 USD (36억 원)	법무부	승소
메이슨	'18.9.13. 한-미FTA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삼성물산 합병 건 투표 찬성 압력 행사	2억 USD (2,374억 원)	법무부	진행 중
윈들러	'18.10.11. 한-EFTA 부속협정	금융위/금감원의 현대엘리베이터 부당 유상증자 방치	1.9억 USD (2,255억 원)	법무부	진행 중
중국 투자자	'20.7.18. 한-중 BIT	① 우리은행의 위법한 담보권 실행 ② 민·형사법원의 부당한 재판	미정	법무부	진행 중

■ **【론스타 사건】** 심리기일(2016. 6. 2. ~ 3.)을 마치고 절차종료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20. 3. 6.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의 사임으로 절차가 정지되었고, 2020. 6. 23. 이안 비니가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며 절차가 재개된 상태임

* 절차종료선언으로부터 12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 선고

■ **【다야니 사건】** 패소 판정 후 판정금 지급 문제 대응 중

■ **【미국투자자 서○○ 사건】** 2019. 9. 27. 정부 승소 판정* 선고

* 판정부는 ①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며, ② 한-미 FTA가 보호범위로 지정한 '적용대상투자'도 아니라는 판단 하에 판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정

■ **【엘리엇, 메이슨, 윈들러 사건】** 서면 공방 중

■ **【중국 투자자 민○○ 사건】** 2020. 7. 18. 청구인 중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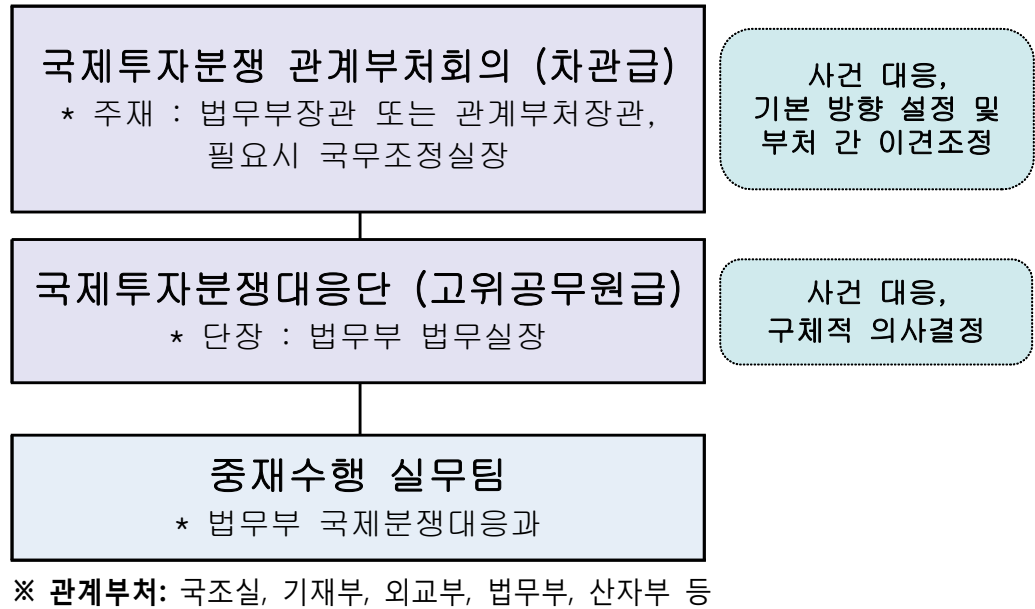
2 우리 투자자가 외국을 상대로 ISDS를 활용한 경우

사건명	제기연도	진행기관	진행현황	결과
백○○ v. 키르기스스탄	2013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진행중	투자자 승소 (취소절차 진행중)
신한엔지니어링 v. 리비아	2013	-	진행중	-
안성주택 v. 중국	2014	ICSID	종결	투자자 패소 (제소기간 도과)
삼성중공업 v. 오만	2015	ICSID	종결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
삼성중공업 v. 사우디아라비아	2017	ICSID	진행중	-
신○○ v. 베트남	2018	ICSID	진행중	-
한국터보기계 v. 미국	2019	ICSID	진행중	-
한국서부발전 v. 인도	2019	불명	진행중	-

※ 2020. 7. 31. 기준, 정부에게 공개되지 않은 ISDS 사건이 추가로 있을 수 있음

자료 2

ISDS 분쟁대응체계 개요



자료 3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날짜	대응	내용
2012. 05. 22.	론스타 중재의향서 접수	▶ 분쟁해결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과 협의 불발시 ISDS 제기 의사 통지
2012. 11. 21.	론스타 중재신청서 접수	▶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신청 ▶ 2012. 12. 10. ICSID에 정식 사건 등록
2013. 05. 09.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 정부 지명 중재인 브리짓 스톤 ▶ 론스타 지명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2013. 10. ~ 2015. 03.	서면 심리절차	▶ [2013. 10. 15.] 론스타 1차 준비서면 ▶ [2014. 03. 24.] 정부 1차 준비서면 ▶ [2014. 10. 01.] 론스타 2차 준비서면 ▶ [2015. 01. 23.] 정부 2차 준비서면 ▶ [2015. 03. 31.] 론스타 관할 추가서면
2015. 05. ~ 2016. 06.	심리기일 개최	▶ [2015. 05. 15. ~ 22.] 1차 심리기일 (증인신문 · 워싱턴 DC) ▶ [2015. 06. 29. ~ 07. 07.] 2차 심리기일 (증인신문 · 워싱턴 DC) ▶ [2016. 01. 05. ~ 01. 07.] 3차 심리기일 (변론 · 네덜란드 헤이그) ▶ [2016. 06. 02. ~ 06. 03.] 4차 심리기일 (변론 · 네덜란드 헤이그)
2020. 3. 6.	의장중재인 사임	▶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의 사임 ▶ 중재규칙에 따른 절차정지
2020. 6. 23.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	▶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이안 비니 선정 ▶ 중재규칙에 따른 절차 재개

자료 4

론스타 사건 쟁점 및 주장 내용

1 개 요

- 론스타 사건은 청구인적격 및 시적 관할 등 관련 관할 쟁점, 외환은행 매각 승인과 관련된 금융 쟁점, 론스타에 대한 각종 과세 처분 관련 조세 쟁점,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쟁점(tax gross-up)의 네 가지 주요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관할 쟁점

가. 정부 주장 요지

- 론스타의 금융 및 조세 쟁점 관련 주장의 전부 내지 상당 부분은 2011년 한국-벨기에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 발효('11. 3. 27.) 이전에 구체화된 분쟁 또는 정부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불소급효 원칙에 따라 시적 관할 부존재로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 론스타 청구인들은 과세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어서 손해가 없으며 과세 처분 대상자인 그 상위 실체 모회사 등의 권리를 대리하여 주장하는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

나. 론스타 주장 요지

- 2011년 투자보장협정은 그 해석상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복합적인 위반행위는 위 협정 발효 후에도 계속되었고, 위 협정이 적용될 수 없더라도 론스타가 영위한 금융업은 1976년 한국-벨기에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
- 2011년 투자보장협정 및 국제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의 증명은 불필요하며, 청구인들은 정부의 실질을 무시한 모회사에 대한 과세 처분 등을 다룰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

가. 론스타 주장 요지

- 론스타의 2007~2008년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국내 법령에 규정된 심사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고,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지연하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HSBC에 대한 매각이 무산되었다는 취지
- 2011년~2012년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지연하였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이러한 부당한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및 가격 인하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

나. 정부 주장 요지

- 정부는 법에 규정된 매각승인 심사 기간은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고 서류 보완기간을 고려할 경우 이를 도과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식 강제매각명령 등 론스타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으므로 정당하게 심사 기간을 연기하였다는 취지

* ① 재경부 변○○, 외환은행장 이○○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외환은행 재정상태 조작 및 뇌물수수를 하였다는 소위 “**혈값매각 사건**”(무죄 확정)과
 ② 론스타가 외환카드 합병 시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가조작 사건**”(유죄 확정)

-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한 바가 없고, 매각 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외환은행의 주가가 하락한 점을 반영하여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재협상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취지

4 조세 쟁점

가. 론스타 주장 요지

-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벨기에 회사들이 국내에서 행한 거래에 일부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부는 론스타에게 최대한의 과세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부당하게 그 면세혜택을 거부하였다는 취지
- 정부는 또한 론스타의 양도 및 배당 소득 등에 대하여 일련의 과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론스타가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취지

나. 정부 주장 요지

-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는 오로지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된 실체 없는 '도관회사'이므로, 오랜 기간 확립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면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
- 정부는 개별 과세 처분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뿐, 자의적·차별적 과세처분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

5 손해액 산정 쟁점

가. 론스타 주장 요지

- 론스타가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대한민국 및 벨기에가 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완벽한 권리구제를 위해 미래의 세금까지 손해배상금 액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소위 'tax gross-up')

나. 정부 주장 요지

- 판정금에 대한 미래의 세금 부과는 아직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발생할지도 불분명한 것이며, 이러한 손해액 산정 방식은 법적 근거 및 인정 선례가 없다는 취지 ▮